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3]

제주 4 · 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 · 3 연구소

고 창 훈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1. 설립배경과 동기

1) 배 경

제주시 중앙로 근처 15평 공간에 4 · 3연구소가 있다. 여기가 용담동, 시청 근처를 거쳐 세번째 이사한 곳이다. 빈약한 외형 때문에 사람들은 '구멍가게 연구소'라고들 하지만 수행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연구소가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려는 의지는 굳건하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4 · 3長征』 맨 뒷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실상과 과제 :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제주 4 · 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 · 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
5.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연구회
7.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쪽에 실리는 안내문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숨겨진 4 · 3의 진실은 우리의 손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여, 그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42년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저희 연구소는 4 · 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채록, 자료수집 등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작업의 결과는 『이제사 말햄수다』와 『4 · 3장정』 시리즈로 출간하여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사건과 관계된 경험,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하여 조언하실 분은 아래의 연구소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4 · 3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4·3연구소의 설립배경은 87년 국민항쟁에 이르러 본격화된 4·3진상규명운동에서 비롯되었다. 87년 이전까지는 소설가와 시인 그리고 학생들이 4·3의 역사성을 제기하였는데, 6월항쟁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일반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87년 대선 때 정치권에서 4·3 진상규명을 이슈화시키며, 88년 제주지역 최초의 4·3 강연회, 89년의 학술세미나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89년 4월 제주지역 민간단체가 4·3 항쟁을 추모하는 최초의 추모제가 열리면서 4·3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공유되어 연구소가 꾸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진실은 연구되어야만 하고 명예도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묵시적인 동의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 설립동기

4·3 연구에 관한 역사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설립배경이라면, 설립동기는 4·3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보자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운동단체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원들이 88년 초부터 1년여에 걸쳐 4·3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주지역 나름대로 연구소를 꾸려갈 역량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부족한 역량을 합쳐서라도 연구소를 출범시키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 이유를 보면 네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4·3에 대한 접근이 너무 관변적이라 해석이 일방적일 뿐더러 자료 자체가 빈약한 수준에 있고, 둘째는 4·3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해야 하는데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증언자들이 점점 年老하여 돌아가시기 때문에 증언채록이 시급하며, 셋째는 4·3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역량이 필요하고, 넷째는 4·3의 당사자인 제주사람들이 4·3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4·3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식이었다.

요약하면 4·3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소를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자료와 채록을 모아가는 작업과 사회의 논의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연구소 설립동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연구활동의 내용

가. 증언집과 논문집 발간

① 1989년 전반기 『이제사 말햄수다』 제1권을 한울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 증언 채록집은 6개월간 제주도의 동부지역인 朝天지역 사람들의 삶을 채록한 것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20개의 증언을 묶었으며, 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좌담을 실었다. 연이어 제2권은 제1권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주도의 서부지역인 厓月지역을 채록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위의 두 책은 그 동안 철저하게 금기시된 4·3 문제를 제주민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 도민의 결의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한겨레신

문』,1989.4.3;『신동아』 1989년 5월호).

② 1991년 제주 4·3을 제주의 현대사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논문집 『제주항쟁』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네 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고창훈의 "제주민중항쟁의 경제사회적 해석"은 해방공간 제주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대응능력을 검토하는 것이며, 안종철의 "제주인민위원회와 전남인민위원회의 조직관계"는 제주와 전남지역의 인민위원회 조직관계가 갖는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박찬식의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은 일제하 해방운동 주도세력이 해방공간에서의 항쟁주도세력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영훈의 "일제하 제주도 인구변동과 경제사회구조"는 일제시대 인구변동과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이 드러내는 경제사적 의미를 살핌으로써 항쟁 전사에 대한 경제사적 조명을 하였다.

이외에도 제주도 서부지역인 한림지역 사람들이 4·3 당시의 삶의 경험을 채록한 내용 『통일되민 다 말허쿠다』에서 항쟁과 맞물린 한림지역 사람들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당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문건 『남로당과 1947년 3·1시위 및 총파업』을 발굴 해제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지녔던 인식과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항쟁의 잘린 뿌리를 찾아나가는 일이었다던가(『한겨레신문』,1991.4.3), 4·3을 항쟁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동아일보』, 1991.4.3) 평가가 말해주듯 이 책의 의미는 높다.

③ 1989년 이후부터 제주 4·3연구소는 정기간행물 『4·3長征』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 첫번째와 두번째는 연구회보 형태로 4·3 논의에 대한 소식을 알렸는데, 90년 3권부터 『4·3長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 내용은 특정한 지역의 채록과 발굴자료 등을 모은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6권을 발간하였다.

그 내용은 특정한 마을에 대한 채록, 증언, 유적지 발굴 상황, 자료, 화보, 독자투고, 논문, 특집 등 6개월 정도의 채록활동과 연구성과를 집약하는 것이다. 대정읍 섯알오름과 百祖一孫之地(섯알오름의 132인 희생자의 유골을 알아볼 수 없어서 백 명 이상의 조상을 한 자손이 모신다는 뜻)에 대한 당사자의 증언 기록이나 구좌읍 다랑쉬굴 특집기사 등은 4·3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 1991년 제주 4·3연구소가 모든 신문사가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단 한 장도 발굴하지 못하였던 해방공간 당시 제주지역의 유일한 신문인 『濟州新報』의 상당 부분을 (1947.1.1~48.4.20) 발굴하여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이 신문은 해방공간 제주지역의 정치·경제적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자주교육의 형성과정, 도민전(濟州道 民主主義民族前線)과 도민청(민주청년동맹) 및 각 계층의 역할, 복시환(福市丸) 사건의 전모와 미군정의 부패구조, 1947년 3·1시위 및 총파업의 전개과정, 각 계층의 투쟁정도와 관련자들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군정의 인식과 도민의 논리, 47년 후반 미군정의 강경정책의 흐름과 신문에 대한 통제력 강화 등을 상세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4·3 전사를 과학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신문이 발굴됨으로써 기획연재를 하던 제민일보사의 "4·3은 말한다"가 이 신문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분명해지고 풍부해

졌다. 신문자료의 발굴은 해방공간 제주역사의 공백을 옳게 기록하는 1차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항쟁의 진실을 메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증언집 발간 활동이 발로 뛴 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역사를 재해석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⑤ 4·3연구소는 최근 슬라이드와 비디오 제작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화방송의 대하극 '여명의 눈동자'가 방영한 4·3 부분이, 그 사실 문제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낸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영상매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4·3연구소가 제주사회문제협의회와 함께 제작한 '제주민중항쟁사'는 4·3의 전반적인 흐름을 연대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주사회문화운동협의회와 공동 제작한 '다랑쉬의 슬픈 노래'는 1992년의 다랑쉬굴의 상황과 관련 증언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하여 역사를 고증하는 자료로도 쓰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⑥ 4·3연구소는 92년부터 월 1회 『4·3 소식지』라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한달간의 활동상황이나 연구소식과 회원들의 소식 등을 알리고 있는데, 1995년 2월 현재 15호째를 발간하였다.

나. 3회의 학술세미나

① 1990년 4월 제주시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학술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고창훈의 "4·3 항쟁의 민족사적 의의와 현재적 과제"와 안종철의 "점령공간에서의 전남지역인민위원회"였다. 고창훈은 4·3을 민족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방식으로 '4·3특별법'의 제정과 '4·3 정사편찬'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연구방법으로 마을단위의 연구와 기록을 정리하는 당사자 주체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종철은 제주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전남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였다.

② 1991년 4월 제주시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는 박찬식의 "일제하 제주도의 민족해방운동", 정해구의 "해방정국의 정치상황과 4·3제주민중항쟁", 고창훈의 "8·15 이후 제주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 양성자의 "한림지역 현장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박찬식은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세력이 항쟁의 주도세력이었음을, 정해구는 4·3이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분단정부를 극복하려는 맥락에서 대구항쟁을 잇는 최후의 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제기하였으며, 고창훈은 당시의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제주항쟁이 내포하는 경제·사회적 의미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4·3이 47년의 3·1 시위와 총파업투쟁과 48년의 5·10 단선 거부투쟁을 잇는 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주항쟁'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무방하리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③ 1992년 4월 서울의 여성백인회관에서 '한국현대사와 4·3 항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기념학술제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회연구소 및 한국정치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학술단체협의회와 한겨레신문사의 후원을 받았다. 염인호는 "일제하 제주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에서 4·3 항쟁이 해방후 갑

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억압에 저항해온 제주도민의 전통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지탱해준 일제시대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항일성과 자주성의 의미를 제기하였고, 강창일은 "태평양 전쟁과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중국, 한반도, 일본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제주도를 장악하였으며, 이러한 이유가 4·3 항쟁시 무자비한 진압정책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심지연은 "미군정의 성격과 4·3 항쟁"에서 4·3 항쟁은 민중의 통일운동과 병행하는 공산지도부의 분단 극복을 위한 조직 가동과의 결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하였는데, 4·3의 폭발력이 위와 같은 민중세력과 냉전논리에 따르는 미군정의 분단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친일세력의 대결 속에서 신전술이 개입된 데 있었다면, 4·3의 비극성은 봉건적 및 식민지적 제반 모순의 해결이 외세의 개입으로 왜곡된 결과로 나타난 민족의 비극이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김창후는 "4·3 제주항쟁의 발발원인에 대한 일고찰"에서 3·1 시위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을 제시했는데 미군정이 이 시점부터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키는 강경대응책을 총력화하면서 제주민중운동 및 민족운동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게 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학술세미나 역시 연구역량의 축적만큼 이루어진 결과였지만, 보다 많은 참여와 깊은 연구로 확대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의 범위를 국제적인 비교연구로 확대하여 4·3의 세계사적 의미를 따지는 국제학술회의에 진력하여야 하리라 본다.

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4·3 증언조사 및 피해 조사활동

연구활동의 세번째 내용은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도 전역에 걸쳐 4·3 증언조사와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연구소 개소 1년 전부터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증언채록을 시작하여 왔으며, 연구소 개설 이후 지금까지 한림읍, 대정읍, 구좌읍, 제주시 지역에 대한 증언채록과 도 전역에 걸친 4·3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 4월 구좌읍을 조사하던 중에 발굴한 다랑쉬굴에서 11구의 희생자 시신과 36개의 유품은 4·3 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고증을 하였을 뿐더러 4·3 진상규명에 대한 획기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열었다(1992. 4. 2 및 4. 4, 4. 7일자 『한겨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6.9, 6.10일자 기사 참조). 4·3연구소는 유골처리는 합장을, 현장은 보존하여 역사유적지로의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유골은 화장처리하였고 무식하게도 현장을 부숴버리고 철조망을 쳐놓고 말았다. 정부의 역사현장에 대한 의식이 너무도 한심한 수준에 있었음을 느꼈다.

또한 1994년 3월 16일 애월읍 소재 발이오름에서 4·3 피해자 유골 1구를 발굴함으로써 4·3 피해의 역사의 현재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때 정부는 신원파악이 명백치 않아 애월읍의 무연고자 무덤에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이러한 피해자 조사가 94년 제주도의회의 피해조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의미도 있었다. 또한 94년의 합동위령제 당시의 피해자 신원파악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마을별 피해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 순례활동 및 공식적인 정치활동

연구활동의 네번째 내용은 일곱 차례의 순례활동이었다(제1회 1989.8.14~15, 제2회 1989.12.30~31, 제3회 1990.7.28~29, 제4회 1991.1.31~2.2, 제5회 1991.7.27~28, 제6회 1992.1.24~26, 제7회 1994.1.28~30). 이 중 다섯 차례는 연구소 주최였으며 두 차례는 공동 주최였다. 1991년 1월 실천문학사와, 1994년 1월 역사문제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순례활동을 함으로써 4·3 유적지 발굴 성과를 대중에 알리기도 하고 4·3을 공유해 나가는 계기도 마련한다. 섯알오름, 이덕구 산전, 동광 큰넓게굴, 한수기, 서귀포 돌집 등의 현장 발굴도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연구소 관련자 4명이 백산서당에서 『제주기행』을 펴냈던 것도 이러한 순례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 밖에 공식적인 활동은 진상규명이나 신원운동 등 정치운동적인 측면을 내포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연구업적과 그에 입각한 정치운동이 결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추모제에의 공식적인 참여였다. 연구소가 1989년 제주 4·3 항쟁 41주기 추모제부터 1993년 45주기 추모제에 주체자의 일원으로서 재야와 함께 4월제 추모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특히 합동위령제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연구소는 민간인 유가족회에게 양보하면서도 도민 전체의 위령제를 성사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4·3연구소는, 대부분의 연구소들과는 달리 그러나 광주항쟁과는 유사하게, 그간 4·3 진상규명운동에 앞장서온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공식적인 활동의 두번째는 마을단위의 신원운동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1991년 제주도 애월읍 원동마을의 학살터에서 최초의 마을굿을 열었을 때 이 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와주었다(1991년 『실천문학』, 봄호).

3. 연구활동의 현실적 맥락

4·3 연구활동이 갖는 현실적 맥락을 더듬어 보겠다. 『제민일보』 4·3 취재반장 양조훈 국장은 4·3연구소와 『제민일보』 4·3 취재반의 차이를 "신문사가 돈을 받으며 하는 것이라면, 연구소는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게 필자의 느낌이다.

첫번째로 4·3 연구활동이 현실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증언집을 내놓았을 때, 4·3을 현재의 삶 속에다 제주도 사람들의 '死·삶'의 충격을 전달한 것이나, 『제주항쟁』을 내놓았을 때 4·3을 항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4·3을 제주도 사람들이 현대사 속에 남긴 '社·삶'의 의미를 곱씹게 한 일이나, 다랑쉬굴을 발굴함으로써 4·3의 총체적 의미를 오늘의 삶 속에서의 '思·삶'으로 드러내 보인 일이 그러하다. 앞으로의 과제

는 4·3을 역사 속에서의 '빛·삶'으로 제대로 역사에 기록해 나감으로써 '壯·삶', '死·삶' 그리고 '思·삶'의 의미를 담아 나갈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두번째로 4·3 연구활동은 4·3에 대한 재해석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4·3의 명칭부터가 이러한 점을 말해준다. 그간 4·3 명칭이 ① (공산)폭동, ② 사건, ③ 사태, ④ 반란, ⑤ (무장)봉기, ⑥ (인민)무장투쟁, ⑦ 4·3, ⑧ 세계사적 사건 등 8개 정도로 불리는 상황에서 제주 4·3연구소는 제주(4·3 민중)항쟁으로 인식함으로써 제주 사람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했다. 필자는 1987년 11월 29일 김대중씨 제주유세문을 메모하는 일을 부탁받게 되었는데, 그 때 4·3의 진상규명을 제기하도록 제안하였다. 바로 다음 날 민정당이 이를 불온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던 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는 정치적 결정이 동반되는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1994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인 서중석 교수가 국사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의 표기를 제주 4·3 항쟁으로 고치자는 제안을 하자, 기득권 세력이 이러한 제안을 정치적인 의도로 공격하며 진지한 학문적 성과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이 사건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마감했던 잘못된 논쟁 역시 역사문제의 정치성을 드러낸다.

세번째로 4·3이 역사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갈등을 야기한다. 4·3연구소가 『제주항쟁』의 책을 내자 대검찰청이 불법간행물로 분류하여 고발한 것이나, 다랑쉬굴을 발굴하자 공안기관이 이의 발표를 저지하려 한 일 등 여러 가지 활동이 그러하다. 특히 4·3 추모제를 몇 차례 원천 봉쇄한 일, 『해방전후사』에 낸 필자의 논문을 불온한 논문으로 파악한 것 역시 그러하다.

4·3 연구가 광주항쟁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총체적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운동적인 측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1991년 기독교방송의 한 프로듀서와 인터뷰할 때 "4·3을 여기까지 끌고온 감회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1992년 다랑쉬굴이 발굴되었을 때, "4·3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4·3 논의 자체가 공산주의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그리고 4·3연구소와 관련된 단체들과 개인들이 4·3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듯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4·3 진상규명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끝까지 고수한 운동의 원칙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면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운동과정에서 형성된 운동원칙을 정리해보자.

①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1의 원칙은 신중한 방법 채택에 있었던 것 같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천봉쇄를 당하고 연행되더라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②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2의 원칙은 당사자가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다. 4·3연구소가 그 규모는 비록 작지만,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문

제해결의 주체로 나서 채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주장도 하였다는 점이다.

③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3의 원칙은 단일한 목표를 정립하는 것인데, 4·3 진상규명의 요구가 그것이다. 다른 여러 주장들도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한 목표는 이 하나였다.

④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4의 원칙은 구체적 대안을 창출한 데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4·3 특별법 제정, 역사정립의 대안으로서 4·3 정사편찬 등이 그것이다.

⑤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5의 원칙은 건강한 시민연대를 이루려는 것이다. 1994년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도민이 주최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위령제를, 5·18과 마찬가지로, 성사시킨 것 역시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자 도민뜻에 따르는 시민연대의 원칙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다섯 가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섬사람의 寬容性의 논리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민들이 정부에게 억압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不寬容性을 정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정부가 조금씩이라도 수용하게끔 하는 寬容性의 정신과 이에 입각한 실천이야말로 정부가 마침내는 4·3의 진상규명을 하게끔 할 것이라는 논리가 필자의 생각이다. 1993년 4월 4일 다랑쉬굴을 순례했을 때,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4·3의 진상을 규명한다. 바로 이들의 부활로 이제 4·3에 대한 논의의 단계는 끝나고 바로 명예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되었다. 4·3 50주기인 98년까지는 4·3의 명예회복이 되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4·3 진상규명이 다섯 가지 원칙을 다 지키면서 不寬容하는 정부에게 시민의 寬容性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3일 저녁 제주시 탑동에서 4·3 행사를 끝낸 직후 당시 도지사를 만나 유족은 합장하고 현장은 보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이 정당한 요구가 거절될 때 귀신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물론 당시의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선거 때마다 집권당이 4·3과 관련된 말을 남발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87년 대선 때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배후에 제주도 출신 4·3 희생자가 있었다든가, 92년 대선 때 남조선공산사건의 주범 이선실이 제주도 4·3의 피해자였다는 등의 얘기가 그러하다.

이러한 정부의 不寬容性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4·3의 진상규명을 요구함으로써 제주도의회가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도민과 제주도의회가 국회와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단체가 나서면 지원하겠다."는(1994.7.4, 이영덕 총리의 국회답변) 미지근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4·3에 대한 不寬容的 태도가 많아 4·3 진상규명의 문제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간의 노력은 4·3 논의 자체를 금기하는 벽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켰을 뿐더러, 4·3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역시 입증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회복의 시기와 방법 및 범위일 뿐이다.

대만 정부가 2·28 항쟁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각 희생자에게 1억 8천만 원씩 보상하고 각 지구에 기념비를 공모하여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4·3의 해결은 왠지 뒤쳐져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만이 2·28 문제를 회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을 거울 삼아서 4·3 문제 해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寬容性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에 명예회복을 끈질기게 요구할 때 더욱 뚜렷한 전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4. 연구모임의 전망과 과제

연구소의 전망과 관련지어 볼 때 연구소는 4·3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듯하다. 단기적으로는 증언채록의 체계화 작업을 해 나감으로써 증언을 토대로 4·3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연구소를 법인화하여 4·3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할 뿐더러 지역의 대학 연구소와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본다.

연구소의 과제 역시 많다. 우선적으로 연구역량의 전문화이다. 4·3이 50주기를 맞이하는 1998년까지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영역의 확대 과제는 세 가지 부분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제주지역에서의 '4·3 정사편찬'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제주대학교 교수 등 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학자가 해야 할 일은 1차적으로 제4대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의 피해조사를 근거로 해석작업을 하여야 할 뿐더러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제주도의회, 제주도 그리고 국회와 정부로 하여금 책임있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95년 6월 제5대 제주도의회에 출마한 사람들이 제4대 의원들보다 더욱 책임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욱이 민선지사나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사람 역시 이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뿐더러 도민들이 바라는 4·3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연구소 운영의 합리화 과제이다. 지금 현재 12명의 운영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장과 소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사장은 홍익대의 정윤형 교수가 맡고 있고 소장은 네 사람이 맡아왔는데(제1대 : 소설가 현기영 1989년 5월~1990년 1월, 제2대 : 고창훈 교수 1990년 2월~1993년 1월, 제3대 : 김창후 교사 1993년 2월~1994년 1월, 제4대 : 고창훈 교수 1994년 2월~1995년 1월), 지금은 강창일 교수가 맡고 있다. 연구인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사진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재정 문제를 검토해 보면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은 2천 5백만 원 수준인데 그 수입충당은 이사진이 40%, 일반회원이 40%, 개인회사금 10%, 자체 책 판매수익 10% 수준이다. 이사진쪽에 부담이 많을 뿐더러 수입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이사진이나 일반회원을 더욱 확대하

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 왜냐하면 연구소의 사업은 예산만큼 추진하게 될 뿐더러, 충분한 예산 확보책을 마련하여야 법인화도 되고 독자적인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합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연구방향의 확대와 연구내용의 심화이다. 4·3 연구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무장대의 삶과 활동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4·3 관련자의 재판기록에 대한 연구 등이다. 또한 제주 4·3 항쟁과 5·18 항쟁과의 비교, 갑오농민전쟁과의 비교, 역사상의 항쟁과의 정밀한 비교가 되어야 민족사적 위치가 명백해지리라 본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대만 2·28 항쟁과의 비교연구, 그리스 내전과의 비교연구, 제3세계의 유사한 항쟁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4·3의 세계사적 의미를 찾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연구는 북한에서의 연구라든가 옛 소련이나 중국, 미국의 자료들을 획득하고 해석하고 비교하는 작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질 때 4·3이 갖는 제주사적·민족사적·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뿐더러 국제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하리라 본다.

5. 대학과 교수사회에의 제언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4·3연구소에 참여하고 4·3 연구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대학과 교수사회에 몇 가지 생각을 말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곧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가 왜 4·3을 연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학자가 연구도 않고 대학교수는 더더욱 피하기 때문에(석사학위 논문 3편, 대학 강사와 교사 논문 1편이 있음) 연구하였다. 아마 고향에 대한 애정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한다. 사실 제주 4·3은 복잡하기도 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연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교수마저 금기시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신들의 땅의 역사를 외면할 때 지식인이 설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10년 이상 이 문제에 매달려 본 경험으로는, 교수가 한 가지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면 금기시된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도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교수가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당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대학의 역할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나름의 시각에서 4·3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두번째 얘기이다. 90년 4월 어느 대학에 강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에서 4·3에 대해 책을 쓴 교수가 만나자고 하였다. 그는 열심히 자기의 연구업적과 시각에 대하여 한참을 얘기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내일 강연시 자기의 입장을 심하게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강연시 그 분의 입장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왠지 우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우울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가 재직하는 대학의 총장은 91년 봄 "자신은 4·3의 경험자이며 피해자이다. 너무도 잘 안다."고 하며 4·3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나의 연구수준을 시험도 했다. 그런데 그 총장이 몇 년 전 역사학과 교수들에게 4·3 연구에 대한 정부의 장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교수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총장이 필자가 92년 4·3 다랑쉬굴 유골 발표 이후 안기부와 대립했을 때 항복하고 미국으로 떠날 것을 권유했다. 그 후 그는 필자를 직위해제시켰을 뿐더러(어쩔 수 없었겠지만),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직위해제를 시킨 일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4·3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절망감과 희망감을 동시에 느낀다. 대학총장이 권력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민주화와 자율화의 선봉처럼 표정하나 바꾸지 않는 이중성과 지성을 팔아먹는 양심 마비현상 속에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떠든다 해도 대학 나름의 자기 목소리를 갖기 어렵다는 대학사회에 대한 우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연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대학사회의 저변을 넓혀간다면 조그만 희망이라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가져보았다. 연구는 돈이 있어야만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이 대학사회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결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4·3 연구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첫번째의 제언일는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필자는 4·3 연구를 하면서 책 속에서나 연구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현실상황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였다. 추모제를 열거나 다랑쉬굴을 찾았을 때 공안기관과의 싸움, 4·3 학술제에서의 논란, 유적지 답사에서의 유족들의 호소와 현장성, 87년 대선시의 4·3 문제제기 경험, 수십 차례의 협박 등을 받으면서 '4·3의 정치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 하면 유적지 순례 때에는 그 당시 고문을 받았던 한 분으로부터 "이러한 연구를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당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면서 느낀 엄숙성, 1992년 5월 15일 다랑쉬굴 유가족들이 선친을 화장시킬 때 통곡하고 오열하는 무겁고도 긴 슬픔이 오래도록 남았다. 현실경험과 연구의 끊임없는 만남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4·3을 연구하는 필자에게 간접체험을 가능케 하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설 때마다 겁나는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진실을 향해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할 때 묘하게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도 생긴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의 선비들이 『왕조실록』을 옹골차게 기록했던 훌륭한 정신을 오늘의 대학사회와 교수가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4·3 연구 속에서 느꼈다. 발로 뛰면서 연구하는 노력이 사실을 기록하는 용기와 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두번째의 제언이다.

필자는 4·3 연구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나서 4·3에 대해 토론도 하고 강의도 했다. 그런데 언제나 핵심은 "당신이 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부분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는 것

이었다. 88년 10월 존 메릴 씨와의 만남에서 연구하는 사람끼리의 치열한 논쟁이 그러하였고, 맹귀노 『월스리트』 한국지부장과의 토론이나, 미국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서도 그러하였다. 나의 대답은 "4·3은 미군정 시대에 미군정의 잘못된 강경정책에 저항한 것이었으며, 5·10 단독정부·단독선거 거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느꼈던 것은 어떤 한 지역을 연구하더라도 직접 거기에서 살면서 제대로 연구하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할 뿐더러, 그러할 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지역연구를 하는 학자가 없다고 외국 학자들이 곧잘 지적하곤 하는데, 심지어 우리 것(4·3)에 대한 연구를 어렵다고 피하다가 외국 학자들의 연구와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세번째의 제언이다.

6. 맺는 말

필자는 4·3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현상학적으로 검토하였다. 필자가 10년간 4·3 연구를 해왔지만,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연구를 보완해 나갔기 때문에 경험적인 내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험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례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사례와 관련되는 사람이 거론되는 실례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필자의 4·3 연구는 필연적으로 현상학적인 방법론에 의지했고, 4·3연구소의 접근 역시 그러하다고 본다. 그것은 어제의 삶의 의미를 오늘의 삶의 의미 속에서 해석하여 살아나게 하고 또한 내일의 삶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성(intentionality)으로 투사되기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지도 모른다.

4·3 연구와 4·3연구소에 대한 경험을 경험론적으로 반추한 이 글이 어쩌면 오늘의 대학사회와 교수가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갈 때 사회적 자리와 목소리를 찾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4·3 연구소를 찾는 교수들이 "연구소가 제주대학교 내에 있느냐"라고 물어올 때 착잡한 기분을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상황은 반대이다. 스스로 자기 돈을 내놓으며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대만의 2·28 연구를 하는 여자 교수가 "한국 정부가 4·3 연구에 돈을 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항쟁의 비교연구 계획을 짜서 대만 정부에 연구자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착잡했다. 우리의 대학이 정부의 돈을 받으며 당당하게 연구할 수 있어야 대학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 속의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

고창훈/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제주 4·3연구소 제2대, 4대 소장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제주사회연구』, 『제주기행』, 『제주항쟁』 등이 있고, "한국 행정의 실천사상에 관한 연구", "제주 4·3 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